

제13회 평의원회 회의록

□ 개요

- 일 시 : 2023. 1. 4(수), 15:30 ~ 17:20
- 장 소 : 행정본관(E14) 4층 제2회의실
- 참석자 : 재직 평의원 11인 중 11인 참석
 - 의장 신하용, 부의장 이창준, 고정식, 김소영, 김유승, 김진우, 박성동, 이동민, 이희승, 이병욱, 유승화 평의원
 - ※ 대리인 : 기획처장 김경수
 - ※ 배석자 : 이태식 교무처장, 박성대 KAIST 클리닉운영팀장, 박정기 인사팀장, 최숙희 노무법인 유엔 파트너/공인노무사

□ 주요 논의내용

○ 의장 모두발언

- 제2대 평의원회가 구성된 이후 지금까지 평의원회의 역할에 대해 고심 중에 있으며 명확한 기능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평의원회는 정책 집행기구가 아닌 심의·자문기구로서 주요 정책 추진 및 대내·외 현안 발생 시 이에 대한 의견수렴 및 입장 발표 등을 통해 KAIST가 올바른 방향으로 지속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고 생각함.

○ (제1호) 전기(제12회) 회의록 보고

- 안건을 원안대로 접수함.

○ (제2호)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경과보고(안)

- 정성훈 기획팀장이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안 경과에 대해 설명함.
- 평의원회에서는 교육부 특별회계로의 편입을 반대하는 입장문을 준비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였으며, 학내 주요 보직자들과 긴밀한 협력을 통해 특별회계법안 편입 추진 중단을 이끌어 내었음.
- 다만, 향후 유사한 사안이 재발할 수 있기 때문에 지속적인 국회 및 관련 부처 설득 등 체계적인 대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제3호) 학칙 개정 주요내용 보고

- 이태식 교무처장이 학칙 개정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함.
- Pass / No Record 제도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답변 등이 있었음.

1. (Q) P/NR 제도 도입으로 인해 학점 인플레이션 등 기존 학생들(특히 코로나 학번 등)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닌지?
(A) P/NR 시뮬레이션 결과 전체 GPA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은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에 기존 학생들과의 형평성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함.
2. (Q) P/NR 제도를 대학원 과정에까지 확대할 계획이 있는지?
(A) 현 제도는 학사과정 1학년 적용을 중심으로 검토되었고, 일정기간 운영 이후 성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확대여부를 검토할 예정임.
3. (Q) P/NR 제도의 성과(평가)의 기준은 무엇인지?
(A) 학생들의 과목 선택(1학년의 상위 고급과목 도전) 현황, 성적분포추이, 정성적인 Survey 등을 성과(평가)의 기준으로 고려하고 있음.

○ (제4호) 의사과학자 양성 추진현황 보고

- 박성대 KAIST 클리닉운영팀장이 의사과학자 양성 추진현황에 대해 설명함.
- 의사과학자 양성 추진현황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답변 등이 있었음.

1. (Q)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현재 의사과학자 양성제도에 대한 문제점 진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의과학대학원의 MD-PhD 프로그램의 문제점이 있는지?
(A) 카이스트에서 박사를 마친 이후 연령 등의 이유로 새로운 연구를 시도하기가 어려운 상황이 되어 다시 임상의로 돌아가게 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음.
(S) MD-PhD 졸업 이후 대부분이 임상의로 돌아가는 것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의과학대학원의 교원(MD)의 대부분도 의대를 마친 이후 연구를 선택한 경우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문제점으로 볼 수 있는지 의문임.
2. (S)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을 위해서는 향후 수년간 막대한 자원이 집중적으로 투입되어야 하므로, 평의원회 차원에서 설립 추진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었음.

- 과학기술의학전문대학원 설립 추진은 KAIST 발전을 위해 매우 중요하므로 차기 회의에 사업책임자(김하일 의사과학자양성 자문역)을 모시고 심도깊은 논의를 진행하기로 함.

○ (제5호) 학연지원직·무기계약직 제도개선 추진 보고

- 박정기 인사팀장과 최숙희 노무법인 유엔 파트너/노무사가 학연지원직·무기계약직 제도개선 추진에 대해 설명함.
- 학연지원직·무기계약직 제도개선 추진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질의·답변 등이 있었음.

1. (Q) 학연지원직과 무기계약직의 제도 개선을 추진하기에 앞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해 당사자들과 기본적인 원칙에 대한 합의이며, 학생들에게까지 광범위하게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노동조합 뿐만 아니라 개별 직원들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라고 이에 대한 방안은?
(A) 노동조합 등 이해당사자들과 제도 개선 추진과정에서 단계마다 협의를 진행하고 학연지원직과 무기계약직 등 해당자 전체에 대해 인터뷰를 실시할 예정임.
2. (Q) 무기계약직의 인사제도와 보상체계가 시급하고 동일 직급내 임금 차이가 큰 문제가 있는데 이에 대한 방안은?
(A) 무기계약직 내 연구직 직무분석 및 업무량 분석을 통해 임금과 업무량 등의 상관관계가 있는지 등을 고려해서 임금차이를 줄여가겠다는 답변이 있었음
3. (S) 평의원들은 현 상황에 대해 우려와 관심을 표명하며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함.
 - ① 정책연구 범위 중 평가 부분이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보이며, 평가에 따른 임금격차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관계자들을 설득할 필요가 있음.
 - ② 인건비 풀링제에 대해서는 KAIST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 해결해야 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심도깊은 분석보다는 정책을 제안하는 정도로 마무리하고 다른 부분에 집중할 필요가 있음.
 - ③ 임금격차를 분석할 때 행정원이 아닌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이 포함되어 있는 부분을 고려하여 분석할 필요가 있음.